

---

# 성명서

---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에 2가지 선행조건을 전제로 법시행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첫째, 증권거래세를 당초 국민께 한 약속대로 0.15%로 낮춰 손실과세 문제를 축소하고, 둘째,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여·야와 정부는 2년전 투자손실에도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의 문제점에 깊이 공감하고,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문제 또한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극소수 특권층과 거액자산가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20년을 거스르는 정책 대역주행에 불과하다.

추경호 부총리는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 마치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즉각 거부하였다. 국민들이 2022년도 폭락장에서 낸 피같은 증권거래세 5.2조원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우선 야당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부터 내놓는 것이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동안 악화된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정부·여당의 간곡한 요청을 심사숙고해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당은 오직 국민들과 개미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선택이 주가폭락으로 손실을 입은 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배려가 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고민해왔다. 오늘 정부에 내놓은 제안은 그 고민 끝에 내놓은 답이다.

정부는 막대한 투자손실로 성난 민심을 진심으로 두려워한다면, 국정파트너인 야당이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진지한 검토 끝에 내놓은 제안을 성심을 다해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 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변화를 촉구한다.

2022. 11. 18.(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 성 환